

北 인프라투자 150조 소요... 정부-금융사 2:8 재원조달

남북 경제협력사업 E-로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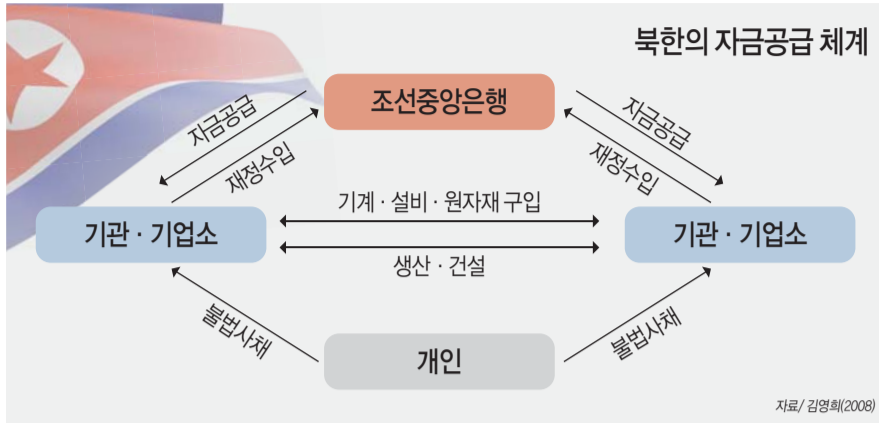
금융의 역할과 과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확대 시급 SPC 설립으로 사업설계 담당해야 '낙후 시스템' 지원·협력도 필요

남·북한 경제를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반도 금융의 맥을 잇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남북 협력 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리스크가 커 시장이 본래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힘들다. 그만큼 공공성이 담보된 정책금융기관이 앞장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간 금융이 빠진다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북한 진출 기업들의 길잡이·안전관 역할을 해주는 '가교금융'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낸다.

과거 서독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해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동독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원활한 통합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서독의 대 동독 투자를 매개로 한 경험 사업은 동독 지역 산업 경쟁력을 향



상하는 한편 산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 통일 독일의 교훈, 금융기관 재원 조달 80%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수요는 총 1400억달러(150조원)에 달한다. 현재 북한의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시급하게 확충해야 할 금융 분야로는 ▲북한 진출 기업 자금 지원 ▲북한 인프라 건설 사업 발굴·건설 ▲북한 주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주거·상하수도 등 민생 개선 개발금융 지원 등을 꼽는다.

민간 금융기관들의 역할도 강조된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핵 문제가 일단락돼 대화국면에 접어들 경우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금융부문이 선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관 건설사업, 경원선 복원 사업, 항만 현대화 사업 등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사업은 대부분 인프라 프로젝트라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공사와 금융사가 협력해 자본을 유치하는 민관협력사업(PPP)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지정학적 위험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해상에 건설하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설비나 저장 플랜트를 이용하면 사

업 중단 시에도 시설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경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면 단순 대출·보증에 그치지 말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사업의 전반적인 설계 등을 담당해야 한다"며 "정부도 금융사의 핵심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협력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재원의 21%만을 정부 예산에 의존했으며 금융기관의 재원 조달 비중이 80%에 달했다.

◆ 낙후된 금융 시스템 교류에도 적극 나서야

북한의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심화하고 사금융이 퍼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원적 시스템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북한의 낙후된 시스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쿠바의 경우 이중경제로 7~8%의 고성장을 이룬 바 있다. 국가가 달러 사용을 권장하다가 자체 통화와 연계해 본인, 가족, 친척 및 이웃 등으로 시장을 꾸준히 제도화해 최종적으로 미국과 수교하는 성장한 것.

또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 해외 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 이전 시기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을 통한 민관협력 활용 등이 거론된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자본은 북한과 같은 폐쇄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저한다"면서 "북한이 우리나라의 지원 아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민간자금과의 협조 용자, 보증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통일 이전에 자국의 경제회생을 위한 외국 자본 유치가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희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은 "현재 남북협력사업 필요자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북투자사업과 상업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금융이 참여하는 '정책성'과 '상업성'이 결합된 기금, 펀드, 온렌딩대출 등 대안적 금융수단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달라진 남북기류에 은행권과 통일금융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금융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남북협력이 재가동될 경우 개선공급지구관리위원회와 세부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벤트성 금융상품도 판매할 방침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성공적 북미회담에 '평화정착' 성큼 文의 '중재자' 역할 빛났다

'북핵문제 해결' 대선때부터 내세워 회담의 공 김정은·트럼프에게 돌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가진 역사적인 정상회담 장면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 벅차고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본 사람이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TV 화면에 등장해 첫 악수를 나눌 땐 정한지 코끝을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북미 정상이 분단 후 65년만에 처음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완벽한 중재자' 역할을 한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미정상회담의 공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저녁에 낸 '6.12 북미정상회담 입장문'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당일 밤 8시20분께는 20분 가량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김 위원장에게는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성공을 누구

보다 기다린 이는 문 대통령 자신이었다.

'북한의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이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하면서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취임 2년째가 된 올해 초엔 신년사를 통해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남측으로 방문한 김 위원장의 특사단과 함께 단일팀 경기를 함께 응원하고 청와대 초청과 예술단 공연까지 관망하는 등 수차례 만나며 교감을 한 것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다.

또 지난 4월27일에는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정상간 남북 대화의 큰 물꼬도 댔다. 특히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 달도 안 된 지난 5월26일에는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러 판문점으로 '암행'을 나가기도 했다. 이 때는 북미회담을 추진하던 당사자들이 비핵화 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또 한번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자본 투입되나... 北 '개혁·개방' 신호탄

트럼프 "핵 위협 없을 때 제재 풀 것" 자본유입대 '비핵화·체제보장' 가능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을 통한 북한 개혁·개방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비핵화된 북한에 미국 자본과 인력이 투입될 경우, 양측 모두 체제보장과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말했다"며 "지금까지는 말뿐이었지만, 새로운 팀이 구성됐다. 김 위원장이 (안전한비핵화를) 실제로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의 비핵화로 더 이상 위협이 없을 때 대북 제재를 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 동영상을 통해 '북한의 변명'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합의문에도 '평화와 변명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을 실었다.

학계에선 북한 비핵화로 평양에 미국 자본과 인력이 들어갈 경우, 확실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미국의 경제 지원 사이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한체제를 보장할지가 가장 큰 이슈"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미국의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본과 국민들이 평양에서 활발하게 되면, 북한 체제 보장과 CVID를 모두 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의문에 CVID가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은 북미 대화의 시작"이라며 "김 위원장은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미국은 국내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조약 체결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

제공할 CVID의 대가에 대한) 판단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상호 불신을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다"며 "두 정상이 대면하고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이 어찌보면 양측이 상대를 신뢰할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회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낙관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핵 문제 부분에 대한 원칙이라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혁개방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상황 아래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두 정상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이라며 "이번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질 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범중 기자 joker@